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문지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 (morganmoon@kiep.go.kr, Tel: 044-414-1189)

오종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ojh@kiep.go.kr, Tel: 044-414-1286)

김영선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oungsun@kiep.go.kr, Tel: 044-414-1272)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차 례

1. 양회(两会) 개요
2. 경제 운영 방향
3. 10대 중점 업무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2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 하방압력 심화, 미중 갈등의 장기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 운영계획을 발표함.
 - 2022년 중국경제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을 거시경제정책 핵심 기조로 정하고, △재정지원 확대 △소비·투자 증진 △국내외 공급망 안정 △신(新)성장동력 발전 등의 경제 운영전략을 발표함.
 - 2021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2단계(두 번째 100년 목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집중한 반면, 2022년은 중국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 및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14차 5개년 계획의 중점 업무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 ▶ 중국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5.5% 내외'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하여 국내 소비와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이번 '5.5%'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제로코로나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고 2035년까지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이슈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한국의 중국경제 하방압력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야기되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충격 등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 2022년 중국은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소비 활성화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이에 따른 산업·시장·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 혁신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은 지역경제의 특징적 발전 및 지역간 협동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역별 발전전략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친환경·디지털 소비를 통하여 새로운 소비 패턴을 육성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확대되는 시장수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비스 무역과 외자 투자 부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도적 대외개방에 따른 중국 진출 기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1. 양회(两会) 개요

■ 2022년 3월에 개최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에서 중국정부는 2021년 경제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2022년 거시경제 목표, 경제 운영 방향, 중점 업무 등을 확정함.

- 양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¹⁾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²⁾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협은 3월 4~10일, 전인대는 3월 5~11일에 개최됨.
- 이번 전인대에서는 「정부업무보고(국무원)」,³⁾ 「202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⁴⁾ 「2022년 정부예산안 보고(재정부)」⁵⁾를 심의·비준함.
- o 「정부업무보고」는 중국의 2021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2022년 거시경제 운영 목표와 방향을, 「202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는 경제 운영의 10대 중점 업무를, 「2022년 정부예산안 보고」는 2022년 중국정부의 재정예산 계획과 주요 방향을 제시함.

■ 「정부업무보고」에 드러난 2022년 경제 운영정책의 핵심 방향은 '안정 속 경제성장', '소비·투자 증진', '국내외 공급망 안정', '신(新)성장동력 발전'으로 요약됨.

- 리커창 총리는 '2021년은 중국이 사회주의 발전 2단계⁶⁾에 진입하는 원년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하 '14.5 계획') 실행 첫 해로 '기념비적'인 한 해였지만 소비 위축, 공급 충격, 경제전망 약화의 경제 삼중고에 직면하였다'고 평가함.
- o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코로나19의 지속적·산발적 확산과 강력한 산업규제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上高下低)의 양상을 나타냄.
- 중국정부는 높아지는 경제하방 압력에 대응하여 2022년에는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장주체인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함.
- o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재정적자율은 2.8%로 감축하지만, 2021년 이월예산과 금융기관 이익 이전 등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2021년보다 2조 위안 증액
- o 침체되어 있는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을 2조 5,000억 위안까지 제공하고, 14.5 계획의 중점 프로젝트⁷⁾인 디지털·저탄소 인프라 투자를 앞당겨 상반기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 o 국내외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제조업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원자재를 공급·생산·판매하며, 산업 환경의 최적화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임.
- o 금융안정보장 펀드 설립, 전면적인 주식등록제(IPO) 시행 등을 통하여 금융 레버리지가 확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적극 해소

1) 정협은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로, 국정 방침에 대한 제안 및 비판의 기능을 수행함.

2)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집행 기구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고위 관료 임명 △국민경제·사회발전 계획 수립 △정부예산안 심의·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함.

3) 「政府工作报告(2022)」.

4) 「关于2021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22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5) 「关于2021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2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6) 2021년 양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발전 1단계 목표인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달성하였다고 선포하였으며, 2049년까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발전 2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발표함. 현상백 외(2020),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7) 14.5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전략적 신흥산업 및 지주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녹색발전 등의 분야 중점 프로젝트들을 제시함. 문지영 외(2021),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 경제 운영 방향

가. 주요 거시경제 목표

■ [경제안정]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내외'로 제시

- 2022년은 '경제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실시되었던 '6대 안정(六穩)'과 '6대 보장(六保)'⁸⁾ 정책을 유지하면서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6% 이상)보다 0.5%p 낮은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함.

■ [고용안정] 도시지역 신규고용 목표 '1,1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실업률 '5.5% 이내'로 제시

- 2022년 대학졸업 예정자 수가 1,07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노동력이 시장에 유입될 전망이며,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021년과 동일한 고용안정 목표를 설정함.
- 중국정부는 고용안정이 소비증진 및 민생안정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2022년 도시 조사실업률 목표를 2021년 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되었던 목표(5.5% 내외)보다 높게 제시함.

■ [물가안정] CPI 상승률은 '3% 내외'로 제시

- 2021년 CPI 상승률은 0.8%로 국내 물가수준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CPI 상승률 목표를 3% 내외로 설정함.

■ [국민소득 안정]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증가율을 유지'할 것을 제시

- 고용 촉진,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 소득증대, 재분배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2022년 국민소득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함.

■ [국제수지 균형] 수출입 규모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수지 균형을 도모

-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와 대외무역을 안정화하고, 중국의 산업·공급망 우위 확보,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 추진,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등의 정책을 통하여 대외무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식량안보] 연간 식량생산량 6.5억 톤⁹⁾ 이상 유지를 목표로 제시

8) '6대 안정(六穩)'은 고용안정(穩就業), 금융안정(穩金融), 무역안정(穩外貿), 외국인투자 안정(穩外資), 투자안정(穩投資), 예측가능성 제고(穩預期)를 의미하고, '6대 보장(六保)'은 주민취업 보장(保居民就業), 기본민생 보장(保基本民生), 시장주체 보장(保市場主體), 식량·에너지 안전 보장(保糧食能源安全), 산업·공급 사슬 안정(保產業鏈供應鏈穩定) 및 기층조직 운영 안정(保基層運轉)을 의미함. 현상백 외(2020), 「2020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9) 2021년 중국의 식량생산 규모는 6.8억 톤으로, 최근 7년간 중국은 풍작으로 연간 6.5억 톤 이상의 식량생산량을 달성하였음. 人民網(2022. 3. 10), <http://cpc.people.com.cn/n1/2022/0310/c64387-32371288.html>(검색일: 2022. 3. 30).

- 최근 중국은 풍작으로 높은 식량수확량을 기록하였지만, 대두 등 일부 농산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중국 내 식량안보를 위하여 식량생산량 목표치를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시함.

■ [생태환경 발전] 생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정성적 목표’를 제시함.

- 생태환경 개선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환경의 질적 개선 △주요 오염물질의 배출 감축 △에너지 소비강도는 14.5 규획 평가 범위 내에서 유연히 조절 등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표를 제안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자재 소비효율은 총 에너지 소비량 평가에서 제외함.

표 1. 2019~2022년 정부업무보고 거시정책 목표 비교

구분	지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거시 경제	GDP 성장률	6.0~6.5%	-	6.0% 이상	5.5% 내외
	주민 소득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성장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성장	안정적 성장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성장
	소비자물가상승률	3.0%	3.5%	3.0%	3.0%
	도시 신규 고용	1,100만 명 이상	900만 명 이상	1,100만 명 이상	1,100만 명
	도시 조사실업률	5.5%	6.0%	5.5%	5.5% 이내
	거시 레버리지 비율	기본 안정	-	기본 안정	기본 안정
통화 재정 정책	통화정책	적당한 긴축 (松紧适度)	적당히 합리적 (合理适度)	유연정확(灵活精准), 적당히 합리적(合理适度)	유연적절(灵活适度) 합리적·충분한 유동성 (流动性合理充裕)
	재정적자 비율	2.8%	3.6%	3.2%	2.8%
	재정 지출	재정적자 규모 2.76조 위안	재정적자 규모 3.76조 위안, 방역채권 1조 위안 발행	재정적자 규모 3.57조 위안	재정적자 규모 3.37조 위안
	지방정부 특별 채권	2조 1,500억 위안	3조 7,500억 위안	3조 6,500억 위안	3조 6,500억 위안
	감세 혜택	부가가치세율 개혁: 제조업 16%→13%, 교통 및 건축업 10%→9% 등	부가가치세율 지속 하향조정, 신규 감세 및 수수료 규모 5,000억 위안	제도적 감세정책 지속 실행, 소액 납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기한 연장	제도적 감세정책 지속 실행, 기업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
정부 투자	중앙 예산 투자 규모	5,776억 위안	6,000억 위안	6,100억 위안	6,400억 위안
	중점 프로젝트	철도 투자 8,000억 위안, 도로, 수운(水运) 투자 1.8조 위안 등	‘양신일중(两新一重)’ ¹⁰⁾ 프로젝트	‘양신일중(两新一重)’ 프로젝트	14.5 규획 중점 프로젝트
기업 지원	대형 상업은행의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	30% 이상	40% 이상	30% 이상	미제시

주: 거시 레버리지 비율은 사회 총부채의 GDP 비중을 의미함.

자료: 「정부업무보고」(2019~22).

나. 거시경제정책 기조

■ [거시경제정책 기조] 2022년 중국정부는 2021년의 ‘안정 속 성장(稳中求进)’이라는 기조에 ‘안정을 최우선(稳字当头)’을 추가하여 경제안정이 최우선 목표임을 명시함.

10) 양신일중(两新一重)은 2020년 5월 22일 리커창 총리가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두 개의 新(신형인프라 건설, 신형 도시화 건설)과 한 개의 重(교통, 수자원 사용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의미함.

- 중국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유효성을 강조하고,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제조업과 신흥산업에 대한 경기부양정책을 대폭 추진할 계획임.
 - o 소비와 투자시장의 회복을 위하여 기업 현금 흐름을 회복시키고 기업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 및 정책 인센티브를 활용할 예정
 - o 선진 제조업, 디지털 경제, 녹색경제 등 중국의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형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R&D 투자 지원을 확대
- 이와 동시에 2022년 안정적인 성장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과도한 산업규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 신용 리스크 완화 △저조한 소비와 투자시장의 회복 △에너지와 인프라 제약으로 인한 신(新)성장 동력의 발전 부진 등의 도전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 [적극적 재정정책] 2022년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 재정적자율 목표는 재정 건정성을 위해 2019년 수준으로 낮추지만 2021년의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재정지출 규모는 확대할 계획임.

- 중국정부가 제시한 2022년 재정적자율 목표인 2.8%는 코로나19 발생으로 확대된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재정적자율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임.
 - o 2022년 재정적자율 목표가 전년대비 0.4%p 낮아짐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약 3조 3,700억 위안으로 추정됨.
 - o 중국정부는 2021년 이월예산 등을 사용하여 재정적자율의 1%에 해당하는 1조 2,670억 위안을 조달할 계획이며,¹¹⁾ 특정 국유금융기관에서 전년도 이익을 재정부로 이전하여 약 1조 6,500억 위안을 추가적으로 조달할 방침임.¹²⁾
- 2022년 재정정책은 △민생 안정 △기업 투자 활성화 △신형인프라 건설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재정지출 예산 규모는 26조 7,000억 위안으로 2021년 대비 약 2조 위안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 o 취업안정을 위하여 취업보조금을 617억 5,800만 위안(전년대비 51억 6,800만 위안↑)까지 늘리고 1,000억 위안의 실업보험기금을 사용하여 취업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임.
 - o 기업에는 약 2조 5,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 중 1조 5,000억 위안은 기업의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留底退税)¹³⁾을 통하여 지원할 예정임.
 - o 이번 감세 혜택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이고 산발적인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며, 중국정부는 현재 영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가치 공제세액 잔액을 6월 말 이전에 전액 환급하겠다고 발표함.
 - o 신형인프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규모는 2021년과 동일한 수준인 3조 6,500억 위안으로 유지될 방침이며, 중앙예산 내 투자를 6,400억 위안으로 책정하여 정부 예산 내 투자 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11) 新浪财经(2022. 3. 5), https://k.sina.com.cn/article_7517400647_1c0126e4705902zreq.html(검색일: 2022. 3. 12).

12) 3월 8일 인민은행은 외환보유고 운영수익 등 1조 위안 이상의 전년도 이익을 순차적으로 재정부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함. 新浪财经(2022. 3. 9), <https://finance.sina.com.cn/roll/2022-03-09/doc-imcwiwss4993281.shtml>(검색일: 2022. 3. 12).

13)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은 기업의 투자 시에 공제받는 부가가치세에서 기업 매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제한 후 남은 잔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임. <https://baike.baidu.com/item/留底退税/23373585?fr=aladdin>(검색일: 2022. 3. 12).

표 2. 중국의 재정지출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목표	실적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2% 내외	3.2%	2.8%	· 0.4%p 하향 조정
재정적자 규모 (조 위안)	3.57조 위안 (중앙 2.75, 지방 0.82)	3.57조 위안 (중앙 2.75, 지방 0.82)	3.37조 위안 (중앙 2.65, 지방 0.72)	· 2021년 대비 2,000억 위안가량 삭감
지방정부 특수채권 발행	3.65조 위안	3.65조 위안	3.65조 위안	· 2021년과 동일한 수준 유지
감세 및 비용경감 등	일정한 수준의 감세 및 비용절감 지속	1조 위안 이상	2조 5,000억 위안	· 이 중 1조 5,000억 위안은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 · 영세기업의 부가가치 공제세액 잔액을 6월 말까지 환급
일반 공공예산 지출	25.01조 위안	24.63조 위안	26.71조 위안	· 재정지출 총규모를 전년대비 증가시켜 고용 및 민생 보장, 시장주체 지원, 국가 중대전략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할 예정
중앙예산 내 투자	6,100억 위안	수치 미제시	6,400억 위안	· 300억 위안 증가 · 14.5 규획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추진

자료: 「정부업무보고(2022)」, 「2022년 정부예산안 보고」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안정적 통화정책] 실물경제에 필요한 유동성을 유연하게 공급하되,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함.

- M2 통화 공급과 사회용자 규모의 증가 속도를 명목 GDP 증가 속도에 맞추어 조절하고, 신규대출을 확대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거시 레버리지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계획임.
 - 2021년 하반기에 인민은행은 이미 두 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7월 0.05%p ↓, 12월 0.05% ↓)하고 대출 우대금리(LPR)를 0.05%p 인하하였으며,¹⁴⁾ 2022년 1월에 추가적으로 LPR,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역RP를 각각 0.1%p 인하하면서 시장유동성 공급 확대 가능성을 시사함.¹⁵⁾
 - 2022년 1~2월 위안화 대출 규모는 5조 1,0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2,700억 위안 증가하였으며, 위안화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11.4% 증가함.¹⁶⁾
- [실물경제 지원 확대]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대출과 재할인 등의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중소·영세 기업을 지원하고, 제조업, 기술혁신, 녹색발전 분야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늘릴 계획임.
- [리스크 관리 강화] 외환시장의 거시 건전성 관리와 미시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여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이며,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해 장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 리스크의 마지노선을 확실히 사수하겠다는 방침임.

14) 新浪财经(2022. 3. 9), <http://finance.sina.com.cn/jjxw/2022-03-09/doc-imcwipih7505237.shtml>(검색일: 2022. 3. 17).

15) 정책금리 인하 후, LPR은 3.7%, MLF는 2.85%, 역RP는 2.1% 수준임. 21世纪经济报道(2022. 3. 16), <https://www.163.com/dy/article/H2K607AA05199NPP.html>(검색일: 2022. 3. 17).

16) 위의 자료.

표 3. 통화정책의 2021년 실적 및 2022년 목표

구분	2021년		2022년
	목표	실적	
M2	· 통화 공급량은 기본적으로 명목 GDP 증가 속도에 맞추어 조절 · 합리적인 유동성 수준을 유지하며 거시 레버리지율의 기본적인 안정 지속	전년대비 9.0% 증가	· 통화 공급량은 기본적으로 명목 GDP 증가 속도에 맞추어 조절 ·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시 레버리지율의 기본적인 안정 지속 · 신규 대출 확대
사회용자 총액		전년대비 10.3% 증가	
중소·영세 기업 자금조달 지원	· 영세기업 대상 포용적 대출의 원금 및 이자 납부기한 연장 · 대형 상업은행의 영세기업 대상 포용적 대출 30% 이상 증가 · 영세기업 대상 지급수수료 인하	2021년 말 기준 영세기업 대상 포용적 대출 및 제조업 중장기 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각각 27.3%, 32.8% 증가	· 영세기업 대상의 신규 포용적 대출의 확대 · 대형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운영비용 인하
환율	·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	2021년 12월 기준 6.3757위안/달러	· 위안화 환율은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

자료: 「정부업무보고(2022)」와 「인민은행 2020년 4/4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10대 중점 업무

■ 2022년 중국정부는 △내수확대 △개혁 심화 △과학기술 자립·혁신 강화 △산업·공급 사슬 안정화 △농업·농촌 우선 발전 및 농촌 진흥 △지역 균형 발전 및 신형도시화 건설 △개방 확대 및 대외 무역·투자 안정화 △친환경·저탄소 발전 △경제안보 △민생보장·개선의 10대 임무를 제시함(부표 참고).¹⁷⁾

■ [① 내수확대] 거시적 조절 및 통제조치 보완을 통해 국내 수요를 효과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대순환을 추진하고 거시경제 전반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 [부담경감·구제정책 보완] 제조업 및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감면과 비용절감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해 실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임.
 - 제조업, 소규모 납세자 및 영세업체에 대해 △세금감면 수준·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단계적 면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환급조치 우선 배정
 - 중소·영세 기업의 융자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혜금융¹⁸⁾ 지원 확대 △중소·영세 기업 대상 대출 규모 및 범위 확대
 - 전력 공급·사용 완화조치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요금인하 유도 등을 통해 중소 상공인 지원

17) 보고는 「정부업무보고(2022)」의 9대 임무를 구체화한 「202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10대 중점 업무를 참고하여 정리함.

18) 중국의 보혜금융(普惠金融, inclusive financing)은 일명 ‘포괄적 금융’이라고 불리며,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출, 창업보증 대출, 빈곤층 소비 대출, 학자금 대출, 농촌경영자금 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로서 모든 구성원에 대한 전방위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 [유효투자 확대] 14.5 규획의 102개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
 - 2022년 지방정부 특별채권으로 3조 6,500억 위안 배정, 중앙예산 내 투자 관련 예산 6,400억 위안 배정
 - △전략적 신흥산업 △농업농촌, 수리, 도시건설사업, 재해 방지·저감 △중서부 중소도시 및 국경·변방(抵边) 지역 도시 인프라 개선 등의 중점 프로젝트 추진
 - 도시 건설·교통·수리·생태환경 등 취약부분 개선(补短板)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장려하고, 정부·사회자본협력(PPP) 모델 보급과 인프라 분야 부동산투자신탁(REITs) 시범사업 가속화를 통해 선순환적 투자구조 구축
- [소비회복 촉진] 벌크 상품·서비스·친환경·스마트 소비를 지원하고 스마트 리테일·디지털 문화·스마트 관광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와 실버·야간 경제 육성, 소비재 품질 감독 강화를 통해 소비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 인프라 건설 추진] △교통 △수리 △물류 △에너지 △신형인프라 등과 관련한 중요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물류·제조업 간 융복합 혁신발전과 일부 신형인프라 관련 사업을 가속 추진할 계획임.

■ **[② 개혁 심화]** 중점 분야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시스템 구축과 경영환경 조성에 주력하고자 함.

- [높은 표준의 시장 시스템 구축] △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공정한 경쟁 △사회 신용 관리 등 시장 시스템의 기초적인 제도를 완비하고, 생산요소 시장화 배치 개혁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화하고 민영경제 발전환경을 정비하고자 함.
 - 대기업과 중소·영세 기업이 상생·공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영업자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
- [중점 분야 체제 개혁 심화] 예산 성과관리 개혁, 조세징수 관리제도 완비, 자본시장 개혁, 독점 업종의 체제 개혁, 신에너지 가격 형성체계 구축, 토지 관리제도 개혁 등 분야별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시장화·법치화·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 '팡관푸(放管服)¹⁹⁾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경영환경 법규 체계를 완비하며, 디지털 정부 건설 강화, 정부의 감독관리 책임 강화, 독과점 및 불공정 경쟁 방지 강화 등을 통해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

■ **[③ 과학기술 자립·혁신 강화]**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 자립과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 강화 △혁신 플랫폼 적극 활용 △전략산업 집중 육성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 △혁신 주체 역량 강화를 세부 과제로 제시함.

- [핵심 기술 난관 돌파] 기초연구 및 응용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과학 연구기관의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과학 연구인력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기술 난관을 극복하고자 함.
 - 바이오 의약품·첨단기기·핵심 정보 시스템·친환경 및 저탄소 에너지 발전·기초 소프트웨어 등 기초 및 선진 기술의 연구개발 가속화
 - 대형 의료장비, 첨단 의료용 소모품 R&D 지원, 표준 제정과 시행 동시 추진, 혁신 원천기술 개발·성과 전환·시장 적용 활성화

19)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을 의미함.

- [높은 수준의 혁신 플랫폼 구축] 국가실험실,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제조업 혁신센터 등의 혁신 플랫폼 건설을 확대함으로써 혁신 발전을 선도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사업을 조속히 착수함.
 - 전년도에 이어 ‘치아보즈(卡脖子)²⁰’ 문제 해결이 중점 과제로 포함
-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바이오·신소재·항공우주·해양장비·신에너지 등을 포함한 신흥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 △디지털 산업화 및 산업 디지털화의 연계를 통한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우위 확보 △제도 정비를 통한 플랫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네트워크 안보 수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함.
- [시장주체의 혁신·창조 활력 제고] △기업, 교육 및 연구기관 등 각 혁신주체가 상호 협력하는 혁신 연합체 구축 △과학기술 혁신 관련 금융 지원체계 마련 △혁신 창업 생태계 육성을 통한 공급망 안정 촉진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혁신동력을 제고하고자 함.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R&D 비용 추가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 기업의 기초연구 투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지적재산권 담보대출 전 주기 지원 서비스 시행 등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요소를 갖춘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 집중 육성

■ [④ 산업·공급 사슬 안정화] 산업·공급 사슬의 원활한 순환과 실물경제 근간의 공고화를 위해 △산업·공급 사슬의 안정 보장 △산업경제 회복 △제조업 핵심 경쟁력 제고 △산업의 최적화·고도화를 중점 과제로 제시함.

- [산업·공급 사슬의 안정 보장] 잠재 리스크 처리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반도체 공급 채널의 안정화 추진, 공급사슬 업·다운 스트림의 안정적 원자재 공급·생산·판매, 벌크 상품의 비축 조절 강화 등 산업·공급 사슬의 안정 보장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조기 경보체계 구축 및 리스크 분석·연구 강화를 통해 산업·공급 사슬 관련 잠재적 리스크 및 문제 대응
 - 일부 원자재의 공급 및 가격 변동 현황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여 공급·생산·판매의 안정화 도모
- [산업경제 회복] 제조업 및 중소·영세 기업에 대해 △설비기기 관련 세전공제 및 증장기 대출 확대 △기술개선 △새로운 업태 및 비즈니스 모델 육성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요 원자재를 비롯한 일차산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화를 추진해 산업경제의 회복과 안정화를 촉진하고자 함.
- [제조업 핵심 경쟁력 제고] 전통산업 및 중점 산업영역의 첨단화·스마트화·친환경화를 촉진하고,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수준을 제고하며, 국가 제조업 고품질 발전 시험지역을 조성해 핵심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임.
- [산업의 최적화·고도화 촉진] 산업의 최적화 및 고도화 달성을 위해 △산업구조 조정 지도목록 수정 △철강·비철금속·건설자재·원료약 산업의 친환경화·첨단화 추진 △석유화학 산업구조 최적화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세무·금융 구제조치 시행 △생활형 서비스업의 고품질화·다양화 촉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자 함.

■ [⑤ 농업·농촌 우선 발전, 농촌 진흥] △식량안보 수호 △빈곤층 구제와 신형도시화 연계 △농촌 소비 확대 △도농 융합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 [식량 및 주요 농산물 생산·공급 안정] 식량 파종면적의 안정적인 확보, 식량 비상 대응 보장체계 구축, 식량 품질안전 관리감독 강화, 종자산업 발전 추진 등을 통한 식량안보 수호를 강조함.

20) 자체 기술력 부족과 핵심 기술의 수입 의존 문제를 지칭함.

- [탈빈곤 성과 공고화] 빈농 구제에 대한 후속조치 확대, 빈곤층의 이전 및 정착을 위한 신형도시화 건설 추진, 농촌 소비 지원, 농업 인프라 여건 개선, 탈빈곤 지역에 국가 농촌산업 융합발전 시범구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자 함.
- [농촌 건설 행동 실시] 도농 융합발전 촉진, 농촌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확대, 농촌 택지제도 개혁 시범사업 전개, 농촌 집단재산권 제도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
 - 농촌의 생산·생활·생태 공간 최적화, 농촌 주거환경 정비 5년 행동 지속 시행, 농촌의 화장실 개선 및 생활하수 처리 추진, 농촌의 생활쓰레기 분류 및 자원화 활용 확대
 - 신형 농촌 집단경제 발전, 농촌진흥 인재 육성 강화

■ **⑥ 지역 균형 발전, 신형도시화 건설** 기존의 지역 발전전략을 토대로 신형도시화 건설 수준 제고하고 소수민족과 농업 이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지역 발전전략 추진]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승안신구(雄安新区) 건설,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발전전략,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등 기존의 지역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역별로 비수도 기능의 분산, 환경오염 관리 강화, 교통·운송 인프라 확대, 산업 이전과 같은 중점 과제를 제시함.
- [지역 균형 발전 수준 향상] 서부·동북·중부·동부 지역별 발전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역 및 도시에 특화된 플랫폼 구축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장려함.
 - 소수민족 지역의 생산·생활 여건 개선 지원, 각 민족의 교류·융래·융합 강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고취
 - 국가급 신구, 공항경제시범구(临空经济示范区), 산업 이전유치 시범구, 국가 자주혁신시범구, 첨단기술산업 개발구(高新区), 해양경제발전 시범구 등의 건설과 질 높은 발전 추진
- [신형도시화 건설 수준 제고] 농업 이전 인구²¹⁾의 시민화 추진, 도시화 공간 배치 최적화, 특색마을(特色小镇) 지속 발전 등을 추진하고자 함.
 -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생활하는 농업 이전 인구의 정착을 지원
 - 청위지역(成渝地区) 쌍성경제권(双城经济圈) 건설 지속 추진, 창장(长江) 중류와 베이부완(北部湾) 등 도시 군 발전을 위한 '14.5' 실시방안 발표

■ **⑦ 개방 확대 및 대외 무역·투자 안정화** 대내외 개방을 연계하고, 개방 플랫폼의 역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며 국제협력에서 새로운 경쟁우위를 육성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해나갈 계획임.

-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 시행]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기술·핵심 설비부품 등의 수입 확대와 함께 중국 브랜드의 수출을 지원하며, 내륙 개방시험구 고도화 및 시범지역 내 제도형 개방을 추진함.
 - 선진기술, 중요 설비, 핵심 부품, 공급부족 농산품 등의 수입 확대와 중국 브랜드 역량 강화를 통한 고기술·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지원
 - 내륙 개방시험구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국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구, 디지털 무역시범구 등의 건설 추진
 - 자유무역시험구 및 전국 범위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고,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21) '농업인구의 이동'은 농업인구가 농업 내에서 직종 전환(예: 재배업→양식업) 또는 농업 이외의 기타 부문(업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함(百度百科 참고).

자유무역항 등의 시범지역에서 국제 표준에 적합한 제도형 개방 추진

- [외국인투자 활용 수준 제고] 선진제조업·첨단기술 산업 및 중서부·동북 지역에 대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제공, 서비스업 개방·확대 종합시범지역 증설, 부동산·저신용 기업의 외채 관리를 최적화할 계획임.
- [해외투자 효율 제고] 해외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투자협력의 방식을 모색하여 양자 및 제3국 시장 협력을 심화하며, 해외투자 구조 최적화, 투자 품질 개선, 효율적 리스크 예방 등의 조치를 제시함.
 - 기업의 해외 경영행위를 규범화해 업종별 협회 및 상회가 해외투자에 대한 자율기제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
-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추진]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 방지 △지방의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참여 촉진 △'실크로드 해운'²²⁾ 및 '빙설 실크로드'²³⁾ 발전 가속화 △일대일로 리스크 관리·안전보장 체계 완비 △건강·친환경·디지털·혁신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일대일로 전략 추진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 항구·종합 법집행 구역의 인프라 계획 수립을 가속화하여 세관특수감독 관리 구역으로서의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외형향 경제 발전을 위해 주요 플랫폼과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 규칙의 적극적 모색과 주요 리스크 방지 업무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
- [양자·다자 간 경제무역협력 촉진] RCEP을 시행하고 CPTPP 및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더 많은 국가와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UN, G20, APEC, BRICS 등 다자협력 기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함.

■ [⑧ 친환경 저탄소 발전] 친환경·저탄소·순환 발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염물 배출 감소 및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자원 이용률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녹색 전환 추진] 녹색 전환을 위한 기술 혁신체계 완비, 녹색산업 시범기지 건설, 녹색산업 지도목록 개정 등 녹색 저탄소 발전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녹색기술 교역센터를 건설하고, 중점 산업의 친환경 생산, 금융지원 확대 등을 추진함.
 - 수자원과 식량 낭비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폐기물의 순환 이용률 제고를 추진함.
- [탄소중립 추진] 2021년 하반기에 발표한 탄소중립 마스터플랜²⁴⁾과 분야별 이행방안을 의미하는 '1+N' 정책체계를 개선하고,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함.
 - 저탄소 고효율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수력발전 기지, 태양광 기지를 건설하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기술 개발을 추진함.
 - 탄소 배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상·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무역, 기술 및 금융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 [대기오염 방지] 대기오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오염 배출방지 노력 등을 지속함.

22) '실크로드 해운(丝路海运)'은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의 교역·교류를 지원하는 해운 통로이자,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 종합 물류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세계 29개국 102개 항구를 연결하고 있음.

23) '빙설 실크로드(冰雪丝路)'는 중국이 빙상·설상 운동 및 빙설 문화·관광, 빙설 장비·기계 등의 영역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실무협력 및 교류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통로이자 플랫폼임.

24) 「关于完整准确全面贯彻新发展理念做好碳达峰碳中和工作的意见」.

- [생태계 관리 강화] 생태환경 보호관리와 더불어 대규모 국토 녹화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함.

■ **[㉑ 국내 경제안보]** 경제발전 과정에서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리스크 발생에 대한 사전 방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함.

- [금융 리스크 방지]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가 리스크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고자 함.
 - 금융안정보장 기금을 설립하고, 채권시장 리스크 완화 등을 추진함.
- [에너지 자원 안전보장 능력 제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석유, 천연가스 등의 비축 인프라를 증설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자 함.²⁵⁾
 - 화베이(华北), 시베이(西北) 지역 가스 지하 저장고의 신축 및 확장을 추진
- [부동산 시장 안정 발전 추진] 부동산 규제기조를 유지하되 도시별로 부동산 및 토지 관리를 안정화 하고, 부실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를 처리함.
 - 보장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과 청년계층의 주거난 해소에 주력할 예정
 - 차별화된 주택 대출정책을 실시하고, 상품주택 시장이 주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㉒ 민생 보장·개선]** 대중의 보편적 관심사인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재분배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코로나19 방역 △국가 주권·안보 수호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함.

- [취업 강화] ‘14.5 취업 촉진 계획’을 중점 임무로 실시하고, 지역별 귀촌(返乡入乡)창업원 건설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함.
- [분배기능 개선] 임금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할 계획임.
 - 도농 주민 소득 증가여력을 확대하고, 교사의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함.
- [사회보장체계 완비] 지역별로 상이했던 사회보험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본양로보험은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며, 기타 의료·실업 보험은 성(省) 단위에서 통합 관리함.
- [공공서비스 정책 제도 완비] 기초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더불어 인구문제도 적극 대응하고자 함.
 - [교육] 교육비 부담 감소, 대학교육 개혁, 낙후한 중서부 지역의 교사 역량 제고 등
 - [인구] 세자녀정책 개선,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양로서비스 체계 개선 등
 - [의료] 공공 의료시설 발전, 국가 권역의료센터 건설, 국가 중대 전염병 방지기지 건설 등
 - [문화] 전통문화의 혁신 발전,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 제고, 관광 여가 발전, 휴일제도 개선 등
- [코로나19 방역] 향후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백신 접종 확대와 치료제 연구 개발을 추진함.
 - 방역 역학조사·핵산검사 등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의 방역방안을 개선하며, 산발적인 감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함.
 - 공항 등의 입국기관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수입화물(특히 냉장·냉동 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임.

25) 2020년 중국은 석유, 천연가스의 각각 70%, 45%를 수입에 의존함. IEA(2021. 12), “An Energy Sector Roadmap to Carbon Neutrality in China”

- [국가 주권·안보 수호] 홍콩·마카오의 경제발전 및 민생개선을 지지하고,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전략을 실시할 예정임.
 - 홍콩에 국가혁신과학기술센터를 건설하고, 일대일로 기능을 담당할 플랫폼 조성 등을 추진함.
 - 대만문제에 관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 및 ‘9.2공식’²⁶⁾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 행동 및 외부의 간섭에 대한 반대 의견과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 및 통일 추진 등을 제시함.²⁷⁾

4. 평가 및 시사점

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

- [정부업무보고] 2022년 중국정부는 ‘경제안정’을 거시경제정책 기조로 정하고, △재정지원 확대 △소비·투자 증진 △국내외 공급망 안정 △신(新)성장동력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안정(穩)’, ‘투자(投資)’, ‘개혁(改革)’은 2021년보다 많이 언급되었으며, ‘혁신(創新)’, ‘고용(就業)’, ‘민생(民生)’, ‘소비(消費)’는 2021년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됨.
 - 중국정부는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대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함.
 - 2022년에는 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소비와 투자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상반기에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장기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에는 ‘성장(增長)’이라는 단어가 전년의 절반 수준인 열두 차례만 언급되었으며, 이는 중국정부의 경제운영 방침이 ‘기존 분야의 성장’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발전·개혁·혁신’으로 변화되었음을 시사함.
 - 중국은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 선진 제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디지털과 저탄소 투자 확대 등의 경제·산업 고도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신(新)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표 4. 2022년과 2021년 「정부업무보고」 주요 키워드

연도	안정	안전	발전	성장	개혁	혁신	개방	고용	민생	소비	투자	빈곤 탈피	코로나19
2022	81	18	129	12	44	39	12	32	22	15	21	7	16
2021	64	26	140	23	43	43	17	35	22	17	15	15	25

주: 키워드 중 ‘안정’은 한 글자 ‘안(穩)’의 언급 횟수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키워드는 두 글자 이상 단어로 검색함.
 자료: 「2022년 정부업무보고」와 「2021년 정부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작성.

26) 1992년 반(反)민관기구인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 간 회담에서 도출한 양안(중국·대만)관계의 원칙에 해당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一个中国)에 대한 표현은 양안 각자의 편의대로 한다(各自表述)’가 핵심 내용임. 중국은 대만과 통일에 대한 입장이 일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중국’에 속한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하고 있으며, 양안관계가 긴장에 직면한 근원은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의 하나의 원칙 부정 등에 있다고 지적함. 『연합뉴스』(2015. 11. 7), 「양안 정상외 재확인한 ‘하나의 중국’...92공식이란」; 新华网(2022. 3. 7), 「王毅: 台湾的前途希望在于两岸关系和平发展, 在于实现国家统一」 등 참고.

27) 坚决反对“台独”分裂行径, 坚决反对外部势力干涉, 推进两岸关系和平发展和祖国统一.

■ [경제성장률] 이번에 제시한 ‘5.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상반기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하여 국내의 소비와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경제성장률 목표는 중국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6% 이하로 제시한 낮은 수치이지만, 중국의 GDP 규모, 최근 중국의 경제상황,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를 감안하면 예상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임.
 - ‘5.5% 내외’ 목표는 중국이 올해 달성해야 하는 고용안정, 민생 보장, 리스크 방지의 안정화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해석됨.
 - 기저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계산한 중국의 2년 연평균(2020~21) 경제성장률은 5.1%로, 이는 2022년에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인 ‘5.5% 내외’의 경제성장 목표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이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제로코로나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 및 정상화를 추진하고 2035년까지 GDP 성장 목표(28)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번 중국 양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야기되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충격 등의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 2022년에는 소비와 투자에 집중하여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시기적으로는 2021년의 경제성장률 하락(29)을 전환하기 위하여 2022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거시정책 기조] 중국정부는 경제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할 계획임.

- 2022년 중국정부는 재정적자율을 전년대비 0.4%p 하락한 2.8%로 제시하여 재정정책의 강도가 약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2022년 총 재정지출 규모는 2021년 이월예산과 특정 금융기관의 이익이전 등을 활용하여 전년대비 2조 위안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재정정책 강도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악화된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재정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국유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자금 조달 방식을 시행하는 것임.
- 2022년에 확대되는 주요 재정·금융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 △신형인프라 투자 확대 △신용대출 확대 등으로 요약됨.
 -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규모는 2조 5,000억 위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2020년 감세 목표치(2조 3,600억 위안)보다 약 1,400억 위안 높은 수준임.³⁰⁾
 - 2022년 인프라 투자를 위하여 조달되는 자금 규모도 확대될 전망으로, 2022년에 발행될 3조 6,500억 위안의 지방정부 채권과 함께 2021년에 조달되어 2022년으로 연기된 1조 위안 규모의 자금이 같이 투

28)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의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을 2배 성장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14.5 규획’ 기간 동안 평균 5.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함을 의미함. 문지영 외(2021),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p. 18.

29) 2021년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각각 18.3%, 7.9%, 4.9%, 4.0%로, 연말로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中国国家统计局 DB(검색일: 2022. 3. 13).

30) 2020년 중국정부는 감세 혜택 목표 규모를 2조 3,600억 위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감세 규모는 약 2조 6,000억 위안에 달한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2022년 실제 감세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政府工作报告(2021)」.

입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말부터 중국정부는 기준을 인하 등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신용대출 확대 신호를 시장에 보냈으며, 2022년에는 기업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신규 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감세지원에서 1조 5,000억 위안 규모의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정책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투자 인센티브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4~3/4분기 제조업의 누적 부가가치 공제세액 잔액은 약 917억 위안이었음.³¹⁾
 - 2022년 1조 5,000억 위안 규모의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정책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여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산업규제로 인해 발생한 투자심리 위축 및 기업소득 하락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혁신발전] 중국정부는 △제조업 강소기업 육성 △기업 혁신능력 제고 △디지털과 녹색발전 관련 신형인프라 건설을 통하여 기존의 중국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가지는 문제점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강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중국 정치경제협의회 경제위원회 부주임 류스몐(刘世焜)은 중국경제가 △인프라 효율 저하 △낮은 증산증비중 △기초연구 개발 역량 부족의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중국경제의 신(新)성장동력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³²⁾
 -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라는 문구가 처음 명시되었으며, 중국은 미국의 기술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혁신’의 ‘전정특신(专精特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계획임.³³⁾
 - 현재 4만 개 이상의 ‘전정특신’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 중 강소기업³⁴⁾은 4,700여 개, 제조업 단일분야 우수기업은 600여 개가 있음.
 - 강소기업의 90% 이상은 제조업의 ‘4대 기초’ 분야인 △핵심 기초부품 △핵심 기초소재 △선진 기초공정 △산업기술 기초산업에 분포하고 있음.
 - 2022년 중국은 3,000개의 ‘전정특신’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강소기업의 주도하에 5만 개의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할 방침임.
 - 2022년은 14.5 규획 기간의 두 번째 해로, 14.5 규획에서 명시한 과학기술 혁신과 신형인프라 건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14.5 규획의 102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천명하였고, 2022년부터 「과학기술 체제개혁 3년 방안」과 「기초연구 10년 계획」을 실행할 예정임.
 - 중국정부는 과학 분야 예산을 전년대비 7.2% 증액한 1조 417억 위안(약 1,637억 달러)³⁵⁾까지 확대하였고, 과학기술 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공제율을 75%에서 100%까지 상향조정함.

31) CICC(2022), 「各项政策发力, 引导企业活力回升和融资成本下行, 仍然有利于债券利率下行--2022年政府工作报告点评」, p. 7.

32) 21经济网(2022. 3. 8), <http://www.21jingji.com/article/20220308/d5c338ff5d7a900c0558de859428cb5a.html>(검색일: 2022. 3. 12).

33) 21经济网(2022. 3. 6), <https://m.21jingji.com/article/20220306/herald/441e92e41a3393ab92932ab9a25c97ac.html>(검색일: 2022. 3. 12).

34) 중국은 제조업 핵심 기초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작은 거인(小巨人)’으로 명칭하고 있음.

35) 1달러 = 6.36위안(2022. 3. 30 기준).

- 이와 동시에 앞서 언급한 부가가치 공제세액 환급정책에 따라 환급액의 1/3이 재투자되는 경우 고정자산 투자를 1%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됨.³⁶⁾

■ [공동부유와 탄소중립]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모멘텀 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1년의 중점 정책이었던 '공동부유'와 '탄소중립'에 대하여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평가됨.

-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21년에 중국정부가 강력히 추진하였던 '공동부유'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이 희석된 것으로 평가됨.
 - '공동부유'에 관하여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겨우 한 차례 언급되었으며,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에너지 소비강도 목표로는 '14.5 규칙 평가 범위 내에서 유연히 조절'하겠다는 정성적 목표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감축목표는 제시되지 않음.³⁷⁾
- '공동부유'와 '탄소중립'에 대한 이러한 중국정부의 입장 조정은 2022년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의 제약조건으로 대두될 수 있는 정책들의 추진 강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2021년 중국정부가 '공동부유'를 적극 추진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기업 기부가 이루어졌으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双控) 정책을 발표하는 등 수위 높은 정책 추진을 실행하였음.
 -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가 높은 산업들의 생산 제한³⁹⁾ 및 전력난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공동부유'와 '탄소중립' 정책 강도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 [금융시장 안정]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중국정부는 기업 경영 악화와 레버리지 증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중대 리스크를 예방·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안정 보장펀드'를 개설할 것을 천명함.⁴⁰⁾
 - '금융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는 2018년부터 양회에서 꾸준히 언급된 정책방침이었지만, 2022년에는 보다 '금융안정 보장펀드' 개설이 제시되며 보다 구체적인 금융리스크 해소방안이 제안됨.
 - '금융안정보장펀드'는 공적자금이나 산업자원을 사용하여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금융기관 혹은 금융시장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금융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한 '주식발행 등록제⁴¹⁾의 전면 실행'은 중국이 은행대출과 채권발행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직접투자 채널을 확대하는 등 금융시장의 시장화 요소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36) CICC(2022), 「《政府工作报告》点评: 金融周期下行, 财政加码稳增长」, p. 3.

37) 2021년의 거시경제 목표를 살펴보면, 중국은 '단위 GDP 에너지 소모량을 3% 내외로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고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함. 문지영 외(2021), 「2021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p. 9.

38) 2021년 8월 중국 발개위는 지역별 에너지 소비 이중통제 목표를 제시하면서 에너지 소비 강도와 속도를 줄이도록 천명함. 人民政府(2021. 8. 21),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1-08/18/content_5631846.htm(검색일: 2022. 3. 23).

39) 이중통제 정책으로 에너지 소비가 높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됨. 中国发改委(2021. 9. 16), https://www.ndrc.gov.cn/xwdt/tzgg/202109/t20210916_1296857.html?code=&state=123(검색일: 2022. 3. 22).

40) 21经济网(2022. 3. 6), <https://m.21jingji.com/article/20220306/herald/a780dd061833c81e7ec54d409a0db42c.html>(검색일: 2022. 3. 11).

41) 주식발행 등록제는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신고함으로써 기업의 증시상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상하이와 선전 메인보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사제와 비교하여 절차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현재는 과학혁신판, 창업판과 베이징거래소에서 IPO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증권감독위원회 심사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의 메인보드까지 IPO 등록제를 확대할 계획임.
- [경제안보 강화] ‘경제안보’를 10대 중점 업무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중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제약하는 금융 리스크, 부동산 리스크, 에너지 공급안정 문제를 우선시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2021년 중점 업무 중 하나인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내용을 2022년에는 ‘경제안보’로 편입하였고, ‘경제안보’를 중점 업무로 전면 내세워 강조한 점이 특징임.
 - 다만 중국은 이를 미중 전략경쟁 차원에서 제시하기보다는 중국경제의 대내 리스크 요인 위주로 구성하여 중국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추었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 리스크, 에너지 공급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1년 국가안보 중 하나로 제시했던 ‘식량안보’ 대신 ‘부동산 리스크 안정’을 제시함.
 - 이번에 제시된 ‘부동산 리스크 안정’은 2021년에 불거졌던恒大(恒大)를 비롯한 부동산 기업 채무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동산 부실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산업 내 구조조정을 통하여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에 경제안보에서 제외된 ‘식량안보’ 문제는 농촌 진흥정책으로 편입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임.
 - 경제안보의 ‘금융 리스크 방지’와 ‘에너지 공급망 안정’은 내수 확대, 과학기술 혁신, 공급망 안정 등 신(新)발전전략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및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2022년 중국은 신형인프라 건설 등 14.5 규획 102개 중점 프로젝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음성채무와 기업의 재정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 리스크 방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에너지 공급망 안정’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중요 에너지 자원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공급망 안정 등으로 나누어 추진될 계획이며, 이는 산업 공급망 안정과 과학기술 혁신 등 중국의 ‘혁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됨.

나. 시사점

- [경제 안정화 도모] 중국정부가 ‘경제안정’을 경제 최우선 목표로 제시한 것은 최근 중국경제가 겪고 있는 삼중고를 해결하고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중국의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지난 12월에 개최된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정부는 중국경제가 소비 위축, 공급 충격, 경제전망 약화의 경제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발표함.
 - 특히 산업규제 강화,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된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 중국경제의 소비와 투자는 모두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며, 중국 경제성장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2022년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을 둔화 이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전망으로, 한국은 중국 경제상황 변화

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행하되 이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정부는 재정·통화 정책을 통한 소비와 투자 증진,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잠재 리스크 해소, 기업 혁신과 투자 촉진을 통한 국내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계획임.
- 2021년에 발생했던 중국 기업부채 리스크와 전력난 등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렸던 리스크 요인들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야기되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충격 등의 영향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한국은 중국의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와 경기부양책 추진 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하여 중국경제 리스크 요인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산업 고도화] 2022년 중국정부는 강소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은 중국 혁신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전정특신' 정책은 중국의 핵심 부품, 핵심 소재, 기초공정과 기초기술 산업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으로, 관련 분야에서 한중 기업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 중국의 '전정특신' 강소기업 육성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중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 수출 위축 혹은 글로벌 공급망 내 한·중 기업 간 경쟁 심화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상품 품질 제고, 기술개발 인센티브 제공, 글로벌 공급망 내 긴밀한 협력생태계 구축 등의 전략이 필요함.
- 중국이 국내외 공급망을 정비하고 원자재, 에너지와 같은 전략자원 확보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도 대중의존도가 높거나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전략자원들을 파악하여 관련 자원의 공급망 다각화 및 자원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와 통신제품의 주요 원료이자 대중 의존도가 높은 마그네슘, 게르마늄, 메탈실리콘 등의 원자재에 대해 자원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리튬, 니켈 등의 원자재에 대해서는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균형 발전] 중국정부는 지역경제의 특징적 발전 및 지역간 협동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역별 발전전략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2022년에도 기존에 추진해오던 지역별 특징을 살린 지역발전 전략을 심화·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한국은 각 지역의 경제발전 전략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지역 협력 및 진출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부지역 발전전략으로 청정에너지 기지와 빅데이터 종합시범구(구이저우) 건설을 제시하고, 동북 지역에서는 산림생태 보호지역과 중·러 국제협력시범구 및 동북지역의 개방 선도구를 건설하는 등 지역별 특징에 맞추어 지역발전 전략에 차이를 두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 특성이 비슷한 지역에 대하여 중국은 지역간 협동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역 연계를 통한 산업 공급망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중국정부는 중부지역의 중요 제조업 요충지인 후난성(湘)-후베이성(鄂)-장시성(贛)⁴²⁾을 연계하여 지역 협

동발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 협동발전으로 확대되는 항공, 화공,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 공급망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내용을 한국기업의 산업 진출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소비 활성화] 중국은 소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차세대 경제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소비 패턴을 육성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시장수요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차세대 경제발전 전략인 녹색경제와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친환경 소비와 디지털 소비 등 새로운 소비 패턴 육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친환경 소비는 친환경 스마트 가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충전소 등의 부대시설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며, 디지털 소비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문화 소비, 스마트 관광, 스마트 시티 건설 관련 분야가 확대될 전망이다.
- 한국은 관련 산업의 시장수요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상품의 생산 체인 및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대외개방 수준 제고] 중국은 서비스 무역과 외자 투자 부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함으로써 대외개방 수준을 대폭 향상한바, 한국은 중국의 제도적인 대외개방에 따른 중국 진출 기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 2021년 8월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특별 시행⁴³⁾한 데 이어 2022년 중국은 전국 범위에서 국경간 서비스 무역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할 계획으로,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중국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운수, 법률, 교육, 금융 분야에 내국민대우를 제공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제도가 전국 범위로 확장될 경우 관련 산업 내 외국인 기업 및 개인의 시장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네거티브 리스트 추진으로 서비스 무역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한 항구와 도로망 등 인프라 건설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프라 건설 분야의 소재 수출 및 협력 기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은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외상투자 장려산업목록 확대, 외자기업 내국민대우 실행 등을 실행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외자투자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다만 외국인투자 장려 분야가 선진 제조업과 첨단기술 등 중국의 혁신경제 발전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 회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제도적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KIEP**

42) Hubei는 기계설비, 중소항공기 엔진, 신소재 산업 △후베이성은 자동차, 현대화공 및 에너지, 전자 등의 산업 △장시성은 신재생에너지 차량, 바이오, 항공설비 관련 제조업이 유명함. 湖南频道(2021. 9. 12), <https://hn.rednet.cn/content/2021/09/12/10134594.html>(검색일: 2022. 3. 28).

43) 中国人民政府(2021. 7. 27), http://www.gov.cn/zhengce/2021-07/27/content_5627592.htm(검색일: 2022. 3. 28).

부표. 2022년 경제운영 10대 중점 업무

중점 업무		주요 내용
1	내수 확대	<p>부담경감·구제 정책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조치와 제도적 배분의 상호결합을 견지하여 세금 감면과 환급을 병행 시행 - 제조업과 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감면·비용절감 정책 지속: △세금감면 폭 상향 △적용범위 확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단계적 면제 △영세업체의 경우 100만~300만 위안까지 연간 과세소득액에 대해서 50%의 기업소득세만 부과 -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대규모 환급조치에 있어 제조업을 중점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우선 배정 - 연간 감면 및 환급 세액은 약 2만 5천억 위안으로 예상, 그중 공제세액은 약 1만 5천억 위안 -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의 단계적 인하정책을 지속 시행 - 관련 기업의 불법 비용징수 특별처벌 행동을 시행하여 무분별한 비용징수 및 위약금, 할당금에 대한 조사 처리 - 중소·영세 기업의 용자난 해결을 위해 △보혜금융 커버리지 확대 △보혜영세 대출의 지원도구 활용 △농촌 및 소형기업 지원 재대출 지속 확대 △중소·영세 기업의 용자규모 및 범위 확대, 비용절감 촉진 △보혜영세 대출 잔액 증가 △첫 대출 및 신용대출 공급의 확대 등을 적극 추진 - 금융 시스템이 급리인하, 비용징수 경감 등의 조치를 통해 실물경제로 이익이 양도되도록 추진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최적화를 유도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업종과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용자 지원을 추진하며 맹목적 대출 제한·환수·중단의 발생을 방지 - 기업의 생산경영 비용 경감을 위해 △전력 공급부문의 불합리한 가격인상 저지 △지방 특수어로 업종의 전력 사용에 대해 단계적 우대혜택 지원 △연체 중소기업의 장부청산 여력 확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요금 인하 유도 등을 추진하여 중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p>유효투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3조 6,500억 위안을 배정하고 중앙예산 내 투자예산 6,400억 위안 배정 - 14.5 규획 102개 중점 사업 프로젝트의 고품질 건설 추진 - ‘프로젝트는 계획을 따르고 자금과 요소는 프로젝트를 따른다(项目跟着规划走, 资金要素跟着项目)’는 점을 견지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추진과 신규 프로젝트의 착공을 가속화하며, 프로젝트 계획 준비를 강화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배치 - 토지, 에너지 사용 등의 요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에너지소비목록(能耗单列)을 시행하여 프로젝트의 관리감독을 강화 - 전략형 신흥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설비 리노베이션 및 기술 개선 투자 확대를 지원 - 농업농촌, 수리, 도시건설사업, 재해방지·저감, 비상보장 등 분야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도시의 노후단지 개조를 추진하여 도시 리노베이션을 순차적으로 추진 - 도시 가스관 등의 노후화 리노베이션 개조를 추진하고, 도시 내 침수관리를 강화하며, 중서부 중소도시 기초 네트워크 개선 사업을 실시 - 국경 및 변방 도시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개선 - 투·용자 시스템의 개혁을 심화해 민간자본이 도시건설, 교통, 수리, 생태환경, 사회사업 등의 취약 점 개선(补短板)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 - 정부·사회자본협력(PPP) 모델을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인프라 분야의 부동산투자신탁(REITs) 시범 사업을 가속 추진하여 재고 자산의 활성화 및 투자의 선순환을 촉진
		<p>소비 회복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잠재력을 더욱 발휘하고 인기 소비업종을 지속 육성 - 자동차 등 대중(大宗)소비의 안정과 확대를 위해 자동차 등의 소비재를 구매관리에서 사용관리로 전환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구매 지원금 지속 지원 △도시 주차장 설비와 충전소 및 교차소 등 관련 부대시설의 건설을 강화하여 신에너지 자동차의 소비를 지원 - 서비스 소비를 발전시키고 서비스 분야의 시장 진입을 완화 - 유급 휴가제도 실시 - 소비의 새로운 국면을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 리테일, 디지털 문화, 스마트 관광 등 새로운 형태의 소비를 육성하고 온라인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라이브 커머스 규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 빙설(冰雪)관광 발전 행동계획 실시 추진 - 조건에 부합하는 지방에서 친환경 스마트 가전 구매 지원(家电下乡) 및 산제품 교체 보조(依旧换新) 조치를 시행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지원금 제공 사업을 전개하도록 장려 - 절약형 친환경 저탄소의 생활방식과 소비 패턴을 주창 - 노포(老字号)의 혁신발전 촉진 - 실버경제를 육성 발전시키고 노령화에 적합한 기술 및 제품을 개발 - 국제소비 중심도시의 육성 건설을 추진하고 지역소비 중심의 조성을 촉진 -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의 야간경제 발전을 장려 - 지역사회 상업 부대시설을 완비하여 편리한 도시생활권을 조성하고 현(县)지역 상업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농촌(县乡)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택배물류 배송체계의 연결을 가속화 - 소비재 품질안전 관리감독 강도를 높여 위조·모조품을 단속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소비환경을 개선

중점 업무	주요 내용	
	주요 인프라 건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수리, 물류, 에너지, 신형인프라, 민생 등 분야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추진 - 환장(川藏)철로, 서부 육해 신통로, 연강(沿江)고속철도, 일부 철로 전용선 중점 프로젝트와 환장 고속도로 G318선의 품질 개선 등 가속화 건설 추진 - 징진지(京津冀), 창장삼각주(长三角), 웨이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도시군 간 철도와 시역(교외) 철도 건설을 추진 - '궈도교통 + 토지종합개발' 모델의 보급 확산을 장려 - 중장기 철도망, 국가 도로망, 전국 항구·항로 배치 계획을 정비하고 국가 공공도로와 항구 및 고등급 항로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 - 썌사(三峡) 수운의 새로운 통로 연구 논증을 추진 - 국가 수로망 주요 사업 실시 - 도로·철로·수로 복합운송의 발전 가속화 추진 - 허브공항의 종합 보장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선항공시장을 빠르게 육성하고 국제항공 화물운송 능력을 제고 - '거점도시+핵심화랑(骨干走廊)'의 현대물류 네트워크 건설을 가속화 - 국가물류 허브와 국가 핵심 콜드체인 물류기지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콜드체인 운수단계의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321' 콜드체인 물류 운영체계를 완비 - 물류업과 제조업의 융합 혁신발전을 가속화하고 복합운송 및 스마트 물류 등 새로운 업태 및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을 적극 추진 - 일부 신형인프라 사업을 배치하여 5G, 기가 광네트워크, 통합 빅데이터 센터, 베이더우 산업화 사업, 민용 우주 인프라 등의 건설을 가속 추진하고 전통적 인프라 설비의 스마트화 개조 추진
2	중점 분야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공정한 경쟁, 사회 신용 등 시장 시스템의 기초적인 제도 완비 - 생산요소 시장화 배치 종합 개혁 시범사업 추진, 데이터 요소시장 육성 가속화 - 선전(深圳)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신행시범구' 건설을 통해 시장진입 완화 특별조치 이행, 푸둥신구(浦东新区)의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선도구' 조성 지원 - 법에 근거하여 각 시장주체의 재산권과 합법적인 권익 보호 - 국유자본 배치 최적화와 구조조정 추진,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 개혁 심화,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 전면 완수 - 민영경제 발전환경 최적화, 민영기업에 대해 법에 따른 자원 요소의 평등한 사용과 공개·공평·공정한 경쟁 참여, 그리고 동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 맞춤형 기업구제(惠企纾困) 정책을 적시에 마련하여 기업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양호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공영할 수 있는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영업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체계와 장기적 효과가 있는 제도 구축 가속화
	중점 분야 체제 개혁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성과관리 개혁 심화, 예산의 구속력과 투명성 제고 - 성(省)급 이하의 재정체제 개혁 추진 - 부가가치세, 소비세, 관세 등 세수 입법 추진 - 조세징수 관리제도 완비, 법에 따라 탈세 단속 - 자본시장 개혁 지속 심화, 주식 발행 등록제 전면 시행 - 독점 업종의 체제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 - 전국 통일의 전력시장 건설 추진, 풍력발전·태양광 발전과 같은 신에너지 가격 형성 메커니즘 완비,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단계별 전력요금 정책 완비 - 토지 관리제도 개혁 심화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비즈니스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팡관푸(放管服)' 개혁 지속 추진 - 시장 진입 지속 확대 - 경영환경 법규체계 완비, 경영환경 평가 관련 국가표준 제정 모색 - 디지털 정부 건설 강화, 정무(政务) 데이터 공유 추진 - 정부의 감독관리 책임 강화 - 반독점 및 반부정당 경쟁 강화, 공정경쟁 정책 심화 추진
3	과학기술 자립, 혁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 10년 계획 실시, 과학기술 체제 개혁 3년 난관 돌파(攻坚) 방안 실시 - 기초연구 및 응용기초연구 강화; 바이오 의약품·첨단기기·핵심 정보 시스템·친환경 및 저탄소 에너지 발전·기초 소프트웨어 등 기초 및 선진기술 연구개발 가속화 - 대형 의료장비, 첨단 의료용 소모품 R&D 지원 표준 제정 및 시행의 동시 추진, 혁신 원천·성과 전환·시장 적용 활성화 - 과학 연구기관의 개혁을 추진하고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수립 및 관리 방식 마련 - 인재 육성 메커니즘 완비, 청년 과학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높은 수준의 혁신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실험실 건설 확대, 전국중점실험실 개편 추진 - 베이징, 상하이, 웨이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의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지원 확대

중점 업무	주요 내용	
	구축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시성·선도성이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국가 중대 과학기술 인프라 사업을 조속히 착수 - 산업 혁신센터,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제조업 혁신센터, 기술 혁신센터 등 혁신 플랫폼 건설 확대 - 산업 공통기술 보급 확대, 산업용 소프트웨어 발전 촉진, '치아보즈(卡脖子)' 문제 해결, 산업 혁신 발전 선도
	전략적 신흥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신흥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실시 - 바이오·신소재·항공우주·해양장비·신에너지 등 신흥산업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 - 베이더우(北斗) 위성항법 시스템 산업 발전 적극 추진 - 태양광 발전산업 발전 촉진, 수소 에너지 산업 발전의 안정적 추진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네트워크, AI, 빅데이터 등 신행인프라의 전면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선도적 역할이 두드러지는 중대 인프라 및 응용 시범사업 기획 - 디지털 산업화 및 산업 디지털화의 연계 추진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우위 확보, 네트워크 안보 수호 - 규칙·제도 정비, 관리감독 능력 및 수준 제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추진 - 국가 디지털 경제 혁신발전 시범구 건설 지속 추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실시 - 스마트시티(智慧城市), 디지털 농촌(数字乡村) 발전 추진 -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건설 추진 - 전국 일체화 빅데이터 센터 체제 구축 가속화
	시장주체의 혁신·창조 활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기업이 주도하고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지원하여 각 혁신주체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연합체 구축 - R&D 비용 추가공제 정책 시행 역량 확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R&D 비용 추가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 기업의 기초연구 투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과학기술 혁신 관련 금융 지원체계 완비 - 지적재산권 보호 및 활용 지속 강화, 지적재산권 담보대출(融资) 등 전 주기 지원 서비스 시행, 기술 출자 장려 및 지원 - 산업·공급 사슬의 안보 및 안정에 초점을 맞춰 혁신창업 생태계 육성 센터 조직 - '대중창업·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지속 추진 - 상황 활동 주간(双创活动周) 행사를 지속 개최하여 혁신·창업(双创) 플랫폼 서비스 능력 제고 -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 시스템 완비, '전정특신(专精特新)' 기업 대거 육성, 자금·인재·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 등 지원 확대 - 과학기술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과학기술 혁신동력 증대 - 전면적인 혁신 개혁 실험을 추진하고 혁신·창업을 제약하는 장애요인 해소
4	산업·공급 사슬의 안정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공급 사슬의 전조적(苗头性) 문제 개선을 위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의 분석·연구·판단을 강화하여 돌발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잠재적 리스크를 처리 - 반도체 제조업체의 순차적 생산능력 확대를 유도하여 국내외 공급 채널의 안정화 및 원활화를 도모하고 공급사슬의 정밀한 연결을 추진 - 수요가 적은 고정밀 기술을 맞춤형 공급 - 일부 원자재의 공급과 가격 변동 상황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여 공급사슬 업·다운 스트림에 대한 안정적 원자재 공급과 생산판매의 유기적 협력을 유도 - 대중상품의 비축 조절을 강화하고 국가 대중상품 저장운송기지의 건설을 가속화 - 현대국제물류 공급사슬 시스템의 구축 가속화 - 신에너지 자동차, 의료장비 등 중요 영역에 집중하고 중점 영역에 '1+N' 산업·공급 사슬 연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산업·공급 사슬의 연계 발전을 촉진
	산업경제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경제 운영의 진작 및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을 위한 실시방안과 산업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실시 - 중소·영세 기업 설비기기의 세전공제 역량 확대 - 제조업 중장기 대출의 비교적 빠른 증가세 유지 추진 - 중요 원자재 및 일차 상품의 공급 보장과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주요 프로젝트의 용지, 용수, 환경 보호 등의 요소 보장을 강화하여 산업·공급 사슬의 난제를 해결 - 제조업 기업 중 특히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중점 영역의 소비 잠재력을 끌어내고 기업의 기술개선 추진과 새로운 업태 및 비즈니스 모델의 육성을 통해 산업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촉진
	제조업 핵심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강국 건설과 산업기반 재건 프로젝트를 실시해 전통산업의 첨단화·스마트화·친환경화 촉진 - 중점 산업영역의 에너지 절약·탄소저감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 - 선진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특별행동을 실시하여 국가 신행공업화 산업 시범기지의 클러스터화 발전수준 제고를 지원하고 최초의 국가 제조업 고품질 발전 시험지역을 조성 - 중국 브랜드데이 계열의 행사를 지속 진행하고 수준 높은 중국 브랜드 박람회 및 발전국제포럼을 개최

중점 업무		주요 내용
5	산업의 최적화·고도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을 수정 - 중국 브랜드의 신에너지자동차 발전행동 실시 - 철강, 비철금속, 건설자재 등 중점 분야 기업의 에너지 절감 및 탄소저감 기술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 - 원료약(原料药) 산업의 친환경화 및 첨단화 발전을 촉진 - 서비스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은 업종의 발전 회복을 위해 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정책을 연장하고 국유주택 임대료 감면, 식음료 및 소매, 관광, 공공도로·수로·철로운송, 민간항공 등의 서비스업에 대해 재정·세무·금융 등의 규제지원조치를 시행 -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하고 제조 서비스업의 매개체(载体) 건설을 지원하여 선진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의 융합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활형 서비스업의 고품질화 다양화를 촉진
	식량 및 주요 농산물 생산·공급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안보에 대해 당과 정부의 책임 강화 - 연간 식량 파종면적을 17억 6,000만 묘(亩)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콩과 유류(油料)의 증산 촉진, 옥수수 생산능력 회복세 유지 - 식량 품질안전 관리감독 강화, 식량 산업의 질 높은 발전 추진 - 식량 비상대응 보장체계 구축, 중점 지역의 식량 △하역 △창고 저장 △화물 집결·분산·운반 시스템 구축 강화 - 종자산업 진흥 프로젝트 실시, 현대 종자산업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 농업 과학기술 난관 돌파, 농업기술 보급 및 응용 확대, 농기계 장비 수준 업그레이드 -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 구축 - 국가 흑토지 보호공정 실시, 일칼리성 토지의 종합 이용 확대 - 돼지고기 생산 안정화를 위한 장기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 초지 축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추진, 축산물 공급 역량 제고
	탈빈곤 성과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빈곤 후 빈곤 상태로 회귀하지 않도록 정밀한 모니터링과 시의적절한 지원 강화 - 빈곤 구제 및 이전에 대한 후속조치 확대 - 대규모 이전 지역 조성 및 입주민 정착을 위한 신형도시화 건설 추진 - 농업·농촌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구제 확대 - 소비 지원 시범도시 및 생산지 시범구 조성, 소비 지원을 통한 농촌진흥의 장기적인 메커니즘 완비 - 탈빈곤 지역의 농업 인프라 여건 개선, 높은 생산·이익을 창출하고 특색 있는 농업 발전 추구 - 탈빈곤 지역에 국가 농촌 산업 융합발전 시범구 조성 지원 - 자연재해 위험이 높고 열악한 여건의 산간지역에 대해 재해 방지, 생태 보육, 농촌진흥 협동 융합 발전을 위한 지원 확대
농업 농촌 우선 발전 및 농촌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생산·생활·생태 공간 최적화 - 도농 융합 발전 촉진, 전체 현(县)급 단위에서 도농 일체의 취업·교육·의료·양로 등 정책체계 수립 - 농촌도로 등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시설 건설 확대, 농촌의 급수 보장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 사업 지속 실시 - 농촌 주거환경 정비 5년 행동 지속 시행, 농촌의 화장실 개선 및 생활하수 처리 추진, 농촌의 생활 쓰레기 분류 및 자원화 활용 확대 - 농촌 택지 제도개혁 시범사업 전개, 농촌 집단재산권 제도개혁 지속 추진 - 신형 농촌 집체경제 발전, 농촌진흥 인재 육성 강화 	
6	지역 균형 발전 및 신형도시화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추진, 높은 표준·품질의 승안신구(雄安新区) 건설 추진, 승안신구에서 우선적으로 진행된 비수도 기능의 분산 프로젝트 추진, 베이징의 도시 부도심 발전 지원, 톈진항의 북방 국제해운 허브 건설 가속화 -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의 고품질 발전 추진, 장강 유역 조정 메커니즘과 수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종합 교통운송 체계 완비 - 웨강아오다원취(粤港澳大湾区) 건설 적극 추진, 하드 인프라 연결(硬联通)과 소프트 인프라 연결(软联通)을 병행 추진하여 대만구 지역의 시장 일체화 발전을 가속화, 형친(横琴)·웨이오(粤澳) 심층협력구의 고품질 발전 가속화, 첸하이·선전·홍콩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 개혁개방 지원 - 장삼각일체화(长三角一体化) 발전 수준 제고, 장삼각 생태 녹색 일체화 발전 시범구 및 안베이(皖北) 산업 이전 유치 집적구 등 중점 지역 건설 추진 - 황허 유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 추진, 물 소모가 많은 작물의 재배면적을 엄격히 규제, 중류지역의 수분·토양 유실 종합 관리 가속화, 도시의 오수 수집 파이프 네트워크 및 처리시설의 취약점 보완
	지역 균형 발전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 추진, 대형 청정에너지 기지 건설, 문화·관광 산업 발전 적극 추진, 구이저우(贵州) 빅데이터 종합 시험구 건설 추진 - 동북진흥의 새로운 진전·성과 창출, 「동북면면진흥 '14.5' 실시방안」 실시, 헤이사즈다오(黑瞎子岛) 중러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지속 추진, 대·소 상안령(兴安岭) 삼림지구의 생태 보호와 경제 전환 적극 추진, 창지투(长吉图) 개발·개방 선도구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 「동북진흥 중점 사업 3년 연

중점 업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실시방안의 중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중부지역의 고품질 발전 추진, 후난성(湘)-후베이성(鄂)-장시성(贛) 협동 발전 추진, 산시성(晋)-산시성(陕)-허난성(豫) 황허금삼각(黄河金三角) 산업 이전 유치 시범구 건설 지원 동부의 고품질 발전 가속화 장려, 푸젠성(福建)의 발전과 평탄(平潭) 종합시험구 건설 지원, 산둥성(山东)의 '신구 성장동력 전환 종합시험구(新旧动能转换综合试验区)' 건설 추진 및 새로운 성과 창출 민족지구(民族地区)의 생산·생활 여건 개선 지원, 각 민족의 교류·왕래·융합 강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고취 혁명기지·접경지역·생태퇴화지역·자원형지역·노후공업도시 등 특수한 지역의 진흥 발전 추진 국가급 신구·공향경제시범구(临空经济示范区)·산업 이전 유치 시범구 등 플랫폼 건설 추진, 국가 자주혁신 시범구 및 첨단기술산업개발구(高新区)의 질 높은 발전 추진 해양경제 발전 시범구 및 현대해양도시 등의 건설 지원을 통해 해양자원 개발·이용 수준 제고
	신형도시화 건설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 지속 추진,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생활하는 농업 이전 인구의 도시 정착 촉진 도시화 공간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키고 거대 도시가 주변 시(市)·현(县)에 미치는 파급 효과 확대, 현대화된 도시권(都市圈) 형성 칭위지역(成渝地区) 쌍성경제권(双城经济圈) 건설 지속 추진, 창장 중류와 북부민(北满湾) 등 도시군 발전을 위한 '14.5' 실시방안 발표 특색마을(特色小镇) 리스트 관리 메커니즘 정비
7	개방 확대 및 대외 무역·투자 안정화	다양한 대외무역 안정화 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영세 무역기업 맞춤 지원 확대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구매 등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 및 비즈니스 모델 발전 촉진, 해외창고 표준체계의 구축을 완비하여 글로벌 해외창고 네트워크를 지속 정비 선진기술, 중요설비, 핵심부품, 에너지자원제품, 공급부족 농산품 등의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 브랜드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여 고기술,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을 지원 수입단계 세금 감면 및 수출세금 환급정책의 시행 내륙 개방시험구의 역량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서비스무역 혁신발전시범구와 디지털 무역시범구 건설 및 국가문화 수출기지 건설을 추진 자유무역시험구와 전국에서 국경간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의 시행을 추진하고 자유무역 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 등의 시범지역에서 국제표준에 적합한 제도형 개방을 추진
		외국인투자 이용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 건설과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 촉진에 관한 의견 발표 시행 신규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고 외상투자 장려산업 목록을 확대 수정하여 선진제조업, 첨단기술 등의 산업 영역과 중서부, 동북지역에 대한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실행하고 중요 외자 프로젝트의 착수를 가속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지역을 증설 기업의 외채류 관리 최적화를 위해 부동산, 지방 용자 플랫폼, 저신용 기업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부채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대비
		해외투자 효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주요 프로젝트 협력을 지속 추진하며 생산능력과 투자협력의 새로운 방식 모색 양자 및 제3국 시장 협력을 심화하여 해외투자 배치 최적화를 추진 금융기관 서비스 중점 분야와 프로젝트를 선도 해외투자의 품질 개선 및 효율적인 리스크 예방조치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해 중요 주체의 해외 투자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해외경영행위를 규범화하여 업종별 협회·상회가 해외투자 자율기제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 연결을 착실히 추진하고 주요 프로젝트 협력 강화와 해외 프로젝트 리스크 방지에 집중 지방의 일대일로 고품질 발전 참여를 추진하고 신장·푸젠 일대일로 핵심지역 건설을 촉진 '실크로드 해운(丝路海运)', '빙설 실크로드(冰雪丝路)'의 발전 가속화 촉진 중·유럽 화물열차의 채널 역량 및 허브노드, 항로 확장건설을 강화 일대일로 리스크 관리 및 안전보장체계 완비 추진 건강, 친환경, 디지털, 혁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여 해외 석탄·전력 등의 '양고(两高)' 프로젝트에서 친환경·저탄소 전환 발전을 추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구와 종합 범집행 구역의 인프라 건설 등을 가속화하여 세관의 특수감독 관리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 항구, 도로망 등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 외향형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플랫폼과 산업 발전 기초를 공고화하여 중요 정책 및 중점 프로젝트를 통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의 규칙을 적극 모색 주요 리스크 방지 업무를 한층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압력 테스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리스크 경보와 연구판단 및 처리의 방지·통제 연계 기제를 완비 구축

중점 업무		주요 내용
8	녹색 저탄소 발전	양자·다자간 경제무역협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호를 견지하고 WTO 개혁에 적극 참여 - 고품질의 RCEP을 실시하고 CPTPP 및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적극 추진 - 더 많은 국가와 고표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상호 윈윈의 협력을 강화 -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의 실천과 국제발전 협력을 촉진 - UN 및 G20, APEC, BRICS 등 다자협력 기체에 적극 참여
		녹색 전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 혁신체계 완비, 국가 녹색기술 교역센터 건설 - 녹색산업 시범기지 건설, 녹색산업 지도목록 개정,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육성 - '14.5' 청정 생산(Cleaner Production) 추진 방안 실시, 중점 산업의 청정 생산 전개 - 녹색금융 표준체계 및 평가기제 완비, 국가 산업·금융(产融) 융합 플랫폼 역할 발휘,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환경정보에 대한 법적 공개제도 개혁 심화, 기업의 환경보호 신용평가 제도 도입 추진 - 국가 수자원 절약 행동 지속 실시, 도시 공공 상수도관 누수관리 프로젝트(漏损治理工程) 개시, 징진지(京津冀), 황하 유역, 시베이(西北) 지역 등 중점 지역·유역 수자원 절약 이용, 해수 담수화 시범도시 건설 - 식량 절약 및 손실 감소 추진 - 폐기물자 순환이용 시스템 건설 및 지속가능한 택배 포장 규모화 응용 시범, 대중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 시범기지 건설 및 핵심기업 육성 - 폐강철, 폐비철금속, 폐차량, 폐가전, 폐플라스틱, 음식물 쓰레기 등 도시 폐기물 분류 이용 및 집중 처리 추진
		탄소중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및 '1+N' 정책체계 개선, '탄소 배출 정점 10대 행동' 실시 - 해상풍력 클러스터, 사난(西南)지역의 대형 수력발전 기지 건설 등 대규모 풍력, 태양광 기지 건설 추진 - 안전한 원자력 발전을 추진, 고효율 청정 석탄 사용 추진 - 신재생 에너지 사용 전력망 확대 -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두 번째 이행 주기(2년 차) 안정적 운영 -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위한 설비 개조 실시 -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적극 연구개발 -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双控, 에너지 소비 총량과 효율성을 의미)' 정책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 총량을 탄력적으로 늘리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은 에너지 소비 총량에 불포함 -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에서 탄소배출량 및 효율성 '이중 통제' 방식으로 전환 - 전면 강화된 에너지 자원 절약 추진, 공업·교통·건축 분야의 에너지 절약 강화 - 에너지 효율 기준 이하 중점 업종의 기업 대상으로 설비 개조 실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고품질 발전 촉진 -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 협상 및 협력을 지속 추진, 주도적으로 글로벌 녹색 거버넌스에 참여, 녹색 무역, 기술 및 금융 협력 강화
		대기오염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미세먼지(PM 2.5) 및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 공동방제, 지역간 연계관리 강화 - 도시와 농촌 지역의 오폐수 처리 강화, 강·해역의 오염 배출 방지 강화 -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 배출 방지 지속 추진 - '제로 웨이스트(无废, zero waste) 도시' 건설 추진, 지역 상황에 맞게 생활 쓰레기 분리 및 배출 감소, 자원화 등 추진 - 오폐수 자원화 이용 시범도시 건설, 에너지 절약 및 저탄소 오폐수 처리장 설치
		생태계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물·숲·밭·호수·초원·사막(山水林田湖草沙) 보호 및 생태계 관리 - 생태 복원 중대 프로젝트 실시, 생물 다양성 보호 - 대규모 국토 녹화 행동 전개, 국가공원 주도의 자연보호 체계 구축 - 푸젠(福建), 장시(江西), 구이저우(贵州), 하이난(海南)에서 추진한 국가 생태문명시험구 전국 확대 - 「생태 보호 보상 조례」 제정
9	경제안보	금융 리스크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 사전에 리스크 방지 노력, 채무 증가 억제 - 금융안정보장 기금 설립, 시장화와 법률 기반 운영을 통한 리스크 우려 해소 - 채권 시장의 리스크 완화 추진 - 부실대출 처리 가속화(加快不良贷款处置) -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리스크 발생에 적절히 대응 - 자본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과적 관리감독을 통해 무질서한 자본 확장 방지
		에너지 자원 안전보장 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 천연가스 등의 생산·공급·비축·판매 시스템 건설 추진 - 석유 비축기지 건설 추진, 화베이(华北), 시베이(西北) 지역의 가스 지하 저장고 신축 및 확장 - 석탄 비축 능력 제고, 화력발전소 설비 개선 - 바이허탄(白鹤滩), 양취(羊曲) 지역에 수력발전소 건설 추진 - 대형 풍력 및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확대, 특고압 배전망 시스템 구축 - 전략 및 응급 물자 비축 시스템 구축

중점 업무		주요 내용	
10	민생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 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거주가 목적'이라는 정책기조 유지 - 도시별로 부동산 및 토지 안정 관리 추진, 부실 부동산 기업의 리스크 처리 - 인구 유입이 많은 대도시의 보장성 임대주택 건설 추진,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⁴⁴)의 주택임대 지원혜택을 확대하고, 시민과 청년 계층의 주거난 해소에 주력 - 차별화된 주택 대출정책 실시, 상품주택 시장이 주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
		취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5' 취업 촉진 계획을 중점 임무로 실시, 지역별 귀촌(返乡入乡) 창업원 건설 지원 확대 등
		분배 가능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구조 개선, 지방의 최저임금 기준 합리적 조정 유도, 도농 주민소득 증가 기회 확대, 의무 교육 교사의 임금처우 개선 - 재분배 구조 개선 - 농민소득 증가 촉진,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 법률적 해소
		사회보장체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양로보험 전국 통합 관리,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및 도농주민 기초 양로금 기준 상향 - 주민 의료보험 및 기본 공공 위생서비스 예산 1인당 재정보조기준 각각 30위안, 5위안 상향, 성(省)급 의료보험 통합 관리 추진 - 의약품 및 고가의 의료소모품 구매 범위 확대, 의료보험 적용범위 등 개선 - 성(省)급 실업보험 기준 통합 - 퇴역군인 보장체계 완비 - 새로운 고용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상해보장 시범 실시 -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 완비 - 부녀자, 아동에 대한 합법적 권익 보장, 장애인·고아 등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개선
		공공서비스 정책 제도 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공공서비스 균등화 발전 추진 - 미취학 자녀 교육비 정책 개선, 아동 친화도시 건설 등 추진 - 의무교육 발전 및 농촌일체화 추진, 농촌지역 학교 설립 확대, 인구 규모 증가에 연동하여 교육자원 확대, 직업교육 운영조건 개선 등 - 대학의 '쌍일류(双一流)화 추진, 사회 수요에 맞는 전공 개설, 산학 융합정책 추진 등 - 중서부 지역의 고등교육 발전 지원, 중서부 지역의 교사 역량 제고 -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민간 운영 교육기관 규범화 발전 추진 - 세자녀정책 조치 개선,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을 개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 - 인구 고령화 문제 국가전략 차원에서 적극 대응, 노인 양로서비스 체계 구축 - 공공 의료시설 발전 추진, 국가 의학센터, 국가 권역의료센터 건설 추진, 진료체계 개선 등 - 현대화된 질병통제 시스템 구축, 국가 중대 전염병 방지기지 건설, 공공위생 방제 거버넌스 제고, 중의약 특색 발전 가속화 등 -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 및 혁신 발전 추진, 출판·영화·방송·문화재 등 분야의 발전 촉진 등 - 국가 중대 문화 프로젝트 및 국가 문화공원 건설 추진, 중요 문화유산 및 국가공원 등 중요 자연유산 보호, 공공문화 서비스 수준 제고 등 - 관광 및 여가 분야 발전 추진, 휴일제도 개선, 운동시설, 공원 건설 등
		코로나19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접종 및 치료제 연구개발(백신 접종자 범위 확대, 치료제 약물 도입 가속화) - 외부 유입 방역조치 강화(공항 등 유입지역에 대한 검역 강화, 수입화물(특히 냉장·냉동 물품) 검사 등) - 방역체계 개선(역학조사·핵심검사 등 강화, 농촌지역 방역방안 개선, 산발적 감염 대응 강화를 통해 생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국제공조 추진(진료 기술/백신/약물 연구개발 전개, 백신 지원, 방역물자 지원 등)
국가 주권·안보 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 및 특별행정구에 대한 대승적 안정 수호 - 홍콩·마카오의 경제발전, 민생개선 지지, 국가혁신과학기술센터 건설, 일대일로 기능 플랫폼 조성, 경제 다원화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등 -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전략 실시(深入贯彻落实新时代党解决台湾问题的总体方略), '하나의 중국 원칙 및 '9.2공식' 견지, '대만 독립' 분열에 대해 단호히 반대, 외부 간섭 단호히 반대,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 및 통일 추진, 대만 동포의 복지 개선, 대륙에서 동등한 대우 보장, 양안 산업협력 강화, 양안 공동시장 조성, 중화문화 공동 변영 추진 등 		

44) 도시 거주자를 위한 장기 주택기금의 일종, 고용주와 근로자가 월급여의 일정 비율로 공동 납부함.